

# “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각… 수명연장 감안한 재무설계를”

## 민병두 의원실 -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초고령 사회’ 세미나

고령 위한 보편적·선택적 복지 필요  
관련자문·질의 위한 정보제공 중요

국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금융복지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를 통해 “최근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소득 없이 오래 사는 은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의 기술혁신도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도 점점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제도적 장치 등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층, 나이는 ↑ 소득은 ↓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노년층의 노후자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은퇴

및 노후준비실태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를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32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40대와 50대 세대의 국민연금 희망 수령액은 12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생활비금액과 조달가능 금액 간 차이가 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우리가 맞이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하다”며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좀 더 일찍 노후 대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의장은 “금융복지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들의 물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영역을 제한해선 안된다”며 “금융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함양하고, 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사전 예방적 측면의 보편적 복지와 금융소외계층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후적 측면의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에 참여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뒤에서 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이어 그는 “고령층일수록 금융사기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학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령층 디지털 소외 ↑… 제도·교육 강화해야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년층일수록 디지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려 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잘못 접근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들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을 이용한 사기 등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당국과 기업 측면에서 취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 지원 측면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년층에게 디지털 지식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거나 질의를 할 수 있는 채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공공기관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소재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 등 민간 기구는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디지털과 친숙해지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을 마련해 지점 및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수명 연장을 감안한 적절한 재무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 고령층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적합하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채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자, 보험 뿐만 아니라 대출의 경우에도 고령층의 연금소득, 지출비용 등을 고려한 심사 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대한항공, 日 노선 줄이고 동남아 확대

동남아·대양주·중국 노선 공급 늘려  
내달 16일부터 오사카 등 운휴 돌입

대한항공은 19일 일본 일부 노선에 대한 운휴 및 감편과 함께 동남아, 대양주, 중국 노선 등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6일부터 부산-오사카노선(주 14회) 운휴에 들어간다. 11월 1일부터는 제주-나리타노선(주 3회), 제주-오사카노선(주 4회)도 운휴한다.

일부 기간만 운항하지 않는 노선도 있다. 인천-고마츠노선(주 3회), 인천-가고시마노선(주 3회)의 경우 다음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아사히카와노선(주 5회) 노선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감편 노선도 있다. 주 28회 운항하던 인천-오사카노선과 인천-후쿠오카노선은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각 주 21회로 감편한다. 또한 다음달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 7회 운항하던 인천-오키나와노선은 주 4회로, 주 14회 운항하던 부산-나리타 및 부산-후쿠오카노선은 주 7회로 각각 감편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노선 수요 감



보잉 787-9 항공기. /대한항공

소로 여유가 생긴 공급력을 동계 스케줄 시작에 맞춰 동남아노선, 대양주노선, 중국노선에 고루 투입해 노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대한항공은 10월 27일부터 인천-클락노선에 주 7회 신규 취항한다. 또한 인천-다낭노선에 주 7회를 추가 증편해 총 주 21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인천-치앙마이노선과 인천-발리노선도 주 4회를 늘려 총 주 11회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대양주노선인 인천-브리즈번노선도 주 2회를 늘려 총 주 7회를 운항한다.

중국 노선에는 신규 취항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인천-장가계노선에 주 3회, 인천-항저우노선에 주 3회, 인천-난징노선에 주 4회 각각 신규 취항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천-북경노선의 경우 주 3회 늘려 주 17회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 경총, 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취지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해야하겠지만, 국회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를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직진하는 조국… 가족문제 언급없이 정책 발표

펀드투자·부동산 등 각종 의혹 속에  
정책 비전 발표… ‘물타기’ 지적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첫 정책발표를 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야권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발표가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책 검증으로 맞서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실천을 위한 첫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우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상기했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전자발찌로 재범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에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시에 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러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또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성으로부터 집착과 폭력,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스토커처벌법’ 제정으로 가해자 엄단 및 피해자 보호 의지를 나타냈다.

또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사범에 한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

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조 후보자는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인도 아닌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정책발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슈를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 측도 확산하는 의혹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발표를 통해 이슈를 돌리려는 것 같다”며 “이념 편향부터 후보자 딸의 문제까지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정책적 화두를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도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여야 3당 간사화회를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